

기술 예측을 ‘희망’으로 바꾸자

우울한 성장 전망,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갈등, 치솟는 유가, 환경문제 등 가뜰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무슨 전망이니 예측이니 하는 것들에 관심이 쏠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점쟁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등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면 그 답답함도 더할 것이다.

일찍이 경제학자 슈페터는 기업이나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혁신에서 온다고 했다. 혁신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시장, 조직 등 다양한 혁신을 포괄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의 충격은 그 어느 것보다 컸다. 세계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대략 50~60년이란 콘트라티에프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도 그래서 나왔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시점에 과학기술부가 2030년까지의 기술예측 결과를 내놓았다. 과거에도 비슷한 작업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이유는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이 적중할 확률은 높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예측한다면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의미다. 자연히 국가정책

도 그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도 많아질 것이다. 도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술예측 방법으로 ‘델파이법(delphi technique)’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델파이법은 어떤 문제를 예측함에 있어서 일련의 설문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시킴으로써 의견을 접근시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기술예측은 반드시 전문가들이 더 잘 한다는 보장은 없다. 전문가들은 전문 분야에 얽매어 공급자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따라서 예측의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비해 비(非)과학기술 전문가들의 경우 상상력이 더 풍부할 수도 있고, 또 수요 측면에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번엔 과기부가 내놓은 기술예측은 비전문가들도 비중 있게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기술예측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구슬이 서 말이라도 잘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하고 싶다. 기술예측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술예측을 하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에사키 레오나 박사 등 전문가 35명이 21세기 기술혁신을 전망한 ‘총예측 미래기술’이란 책의 서두에 잘 나타나 있다.

“1980년대에 일본은 생산기술을 통해 세계 경제의 승자가 됐다. 1990년대에는 미국이 정보기술을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였다. 21세기에는 어떤 나라가 어떤 기술로 세계 경제의 승



글_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ahs@hankyung.net

자가 될 것인가?”

기술예측의 배경에는 그만큼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기술예측 결과를 토대로 어떤 회심의 작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선택한 것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일이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낙관적 경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관적 경로로 갈 수도 있다. 각종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사회는 방폐장 부지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고, 지금은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 제기는 더욱 빈발할 것이 분명하다.

그럴 때마다 과학기술자들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 해결하라며 방치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부도, 정치도 실종된 사회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의 과학적 이해도와 함께 시급히 제고돼야 할 것이 사회적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치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낙관적 경로와 비관적 경로가 갈릴 것이고, 다행히 낙관적 경로로 간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다를 것이다. 비관적 경로로 간다면 무엇 때문인지, 낙관적 경로로 가더라도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갈등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법과 제도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부가 과거 개발 시대의 과학기술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이 휴머니즘과 함께 한다는 것, 약자와 소수가 과학기술의 사각지대가 아니란 것을 보여 주자는 주문도 하고 싶다.

얼마 전 어느 방송사 주최로 서울 디지털 포럼이 열렸었다. 미국의 앨 고어 전부통령이 참

석해 주목을 받았던 포럼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나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IT강국의 진면목을 보여주려는 듯 지능형 로봇의 미래에 대해 확신에 찬 비전을 쏟아내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앨 고어 전부통령이 등단해서는 이런 말을 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부모가 외출하더라도 지능형 로봇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 기분이 어떨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과학기술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또한 관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진대제 장관이 휴머니즘을 모를 사람도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휴머니즘을 대비시킨 것으로 비쳐지고 말았다. 어쨌든 앨 고어 전부통령의 말은 우리가 자칫 잊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과학기술과 휴머니즘에 대해서 말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격차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보면 과학기술 격차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 과학기술이 어떻게 하면 약자와 소수,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던져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누구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과 휴머니즘, 약자와 소수에 대한 과학기술의 배려, 이웃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개념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필자는 앞서 기술예측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자는 주문을 했다. 그 희망이 국민 일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 본 얘기다. ㉓

